

식품산업 발전전략

김 영 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 론

세계통화기금(IMF)의 경제위기를 민·관부문의 고통분담과 구조조정으로 극복함으로써 우리경제는 10%가까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막대한 공적자금의 추가와 유가인상 등의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 설비투자가 증가되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등 건실한 경제기반을 다지고 있다.

우리의 식품산업도 1998년 후반부터 시작된 연쇄부도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1999년부터는 성장세로 회복되고 있다. 1998년도 가공식품의 총 매출액은 22조 3천억원으로써 1996년도의 25조3천7백억 보다도 오히려 약 14%감소를 보였는데, 19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예전 호황기의 수준을 회복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

식품산업의 경제기여도를 살펴보면 외식산업등 관련산업의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로 환산하여 볼 때 국내 총생산(GDP)의 2.5%, 제조업 부가가치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후인 2005년에는 생산액이 약 37조 6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산업이다⁽²⁾.

또한 농업과의 관계를 보면 각종 농·축·수·임산물의 약 47%가 식품산업의 원료로서 가공되고 있는 등 농어민이 생산하는 원료를 소비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의 식품산업이라는 점에서 총체적으로 보아 식품산업의 발전은 농촌 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되어 있다⁽²⁾.

그러나 식품산업은 50인 미만의 종업원을 가진 업체수가 전체의 약 80%를 상회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²⁾ 그간 반도체, 자동차 등 소위 첨단산업 육성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소외된 점은 있으나, 체질적으로는 자생력이 강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식품산업은 관련산업과 관련을 갖고 고용과 소비를 창출하면서 경제를 순환·활성화시키는 경제의 중요한 주체이다. 또한 식생활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하는 보건산업 측면의 중요성은 계량화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유형, 무형의 효과를 제공한다.

본 고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기 한 후 이를 개선 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환경분석 및 문제점

우리 나라의 식품산업의 외형 구성 환경을 살펴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는 '99년 12월 말 현재 각각 153,362개소(표 1참조), 647,708개소(표 2참조)로서 외형상으로는 거대한 듯 보이지만 대부분 영세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다(표3 참조)⁽²⁻³⁾. 또한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의 확대에 따라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균성이질을 비롯한 식중독의 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식중독의 피해는 의료비의 증가, 학업의욕 및 노동력의 감소 등 경제·사회적인 비용부담의 증가와 함께 국민의 식품안

전에 대한 불신감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1.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의 현황

(’99. 12 현재)

계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179,845	15,306	51,004	295	420
	식품 판매업	식품냉동· 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식품 소분업
	108,049	151	972	3,648

(자료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표 2. 식품산업의 업체 당 생산액

(단위 : 개소, 백만원)

종업원규모 \n 부문	식료품 제조업		음료품 제조업	
	사업체수	업체당 생산액	사업체수	업체당 생산액
계	5,508	3,964	470	10,648
5인~9인	2,584	747	197	235
10인~19인	1,339	1,168	108	724
20인~49인	988	2,127	80	4,089
50인~99인	308	7,249	40	16,478
100인~199인	168	23,846	22	58,271
200인~299인	61	53,025	11	69,914
300인~499인	35	109,580	9	142,786
500인 이상	25	148,362	3	185,934

(자료원 : 식품연감, 1999)

표 3. 식품접객업소 현황

(’99. 12 현재)

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661,886개소	70,362	535,801	22,706	19,573	13,444

(자료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표 4. 연도별 식중독 발생 현황

(단위:건, 명, %)

구분	'95	'96	'97	'98	'99
건수	55	81 (47)*	94 (16)	119 (27)	171 (44)
환자수	1,584	2,797 (77)	2,942 (5)	4,577 (56)	7,712 (68)
환자수/건	28.8	34.5 (20)	31.3 (-9)	38.5 (23)	45.1 (17)

*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러한 외형적인 환경과 함께 식품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환경요소를 소비자 측면, 제조·가공측면, 행정측면, 국제환경으로 크게 구분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환경

인터넷의 상용화와 디지털 시대의 도래 등 정보전달매체의 발달로 실시간에 식품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가 여과 없이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NGO와 언론의 고발성 역할 증대에 따라 식품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소비자는 위해물질에 대해 정량적이기보다는 정성적 관점에서 '절대적 안전식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식품안전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물론 연계된 식품업체에 막대한 파장이 미치게 되고, 식품산업 전체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부서는 소비자 보호에 있어 진일보한 제도라고 하는 제조물책임법의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행시기에 있어서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식품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식품행정 환경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⁴⁻⁵⁾. 그러나 식품산업에 대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식품위생법규 이외에 산업육성을 위한 법적 도구를 갖고 있지 못하다. 즉 식품산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원료의 확보, 유통, 공장등록 등에 있어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또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식품행정담당 공무원의 감축은 전문화된 식품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단발성 감시에 의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수·축산물 등 원료에 따른 식품관리행정의 부처별 다원화와 감시체계의 중복도 산업측면에서는 혼란을 초래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3) 원료환경

최근 벨기에 산 식육의 다이옥신 사건과 국내 구제역파동에서 보듯이 식품가공산업은 별개로 존재하는 구분된 영역이 아니라 원료→가공→유통→소비까지 이르는 일련의 FOOD CHAIN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가공식품의 안전과 품질은 양질의 원료 확보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원료인 농·축·수산물은 증산을 위해 농약·항생물질 등 인체 위해가능물질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산업의 발달에 따른 중금속·다이옥신·PCBs 등 산업오염물질의 식품오염기회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식

품부문에 있어 세기적·세계적 이슈로 등장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농산물 등 첨단 신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신개발식품(NOVEL FOOD)의 개발 및 유통 이 확산 될 전망이다. 유전자재조합 대두, 옥수수 등 농산물을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식품산업에 있어 광범위하게 걸쳐있어, 원료와 가공산업의 연계성과 문제점을 더욱 잘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수입원료를 포함한 양질의 원료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행정지원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4) 제조·가공 환경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량생산·유통 및 저장성향상을 위한 신기술의 도입·확산이 예상된다. 또한 다양한 식품소재의 사용과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증대될 것이며, 방사선조사 기술의 적용이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른바 '건강표방성식품'이 시장에 주도적인 상품으로 대두 될 것이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특수 연령계층을 겨냥한 '엔젤식품', '실버식품' 등으로 상징되는 '맞춤식품'의 시장이 성장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방식에 있어서는 OEM방식과 TOLL MANUFACTURING 방식의 생산이 증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식품산업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업체와 저질 수입식품으로 인한 부정·불량식품의 문제는 전체 식품산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유통환경

식품산업의 제조원가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비해, 국토면적의 협소(물류거점의 확보 어려움), 교통혼잡, 물류와 관련된 규제로 인한 물류비 증가가 업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²⁾.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인터넷 사용의 상용화에 힘입어 식품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도 비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형판매점(할인점)의 확산으로 인한 유통구조는 유통업소가 제조업소를 지배하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 영세 판매점의 공존 유통구조는 우리 나라의 특성상 계속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업소에 대한 COLD CHAIN체계의 구축이 미흡하다.

(6) 국제환경

국외적으로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식품위생 및 검역위원회(SPS)에서 각 국가의 식품 안전 관련 기준·규격 설정시 적정보호수준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실행지침을 채택(2000. 7. 18)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식품기준·규격의 전면적인 검토와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되어 산업적으로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OECD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비롯한 식품전반의 안전제고를 위하여 특별작업반을 설치하였고 그 작업결과를 주요선진 8개국 회담(G8 정상회담)에 반영한 바 있다. 식품에 있어 세기적·세계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은 2000년 1월 29일 카르테나회의정서로 불리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가 타결됨으로써, 동 식품의 안전성평가와 표시에 대한 국제간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각 국가에서 국내법령에 반영되고 있다. 일반식품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식품위해도분석(Risk Analysis)기법에 입각한 과학적 안전관리정책의 설정 필요성 논의, 사전예방적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의 도입 등을 검토하였다.

(7) 식품산업체 애로 분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설문조사 결과)

식품산업체가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은 유통판매, 관련법규의 이해부족과 내용의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상의 애로사항에

서도 연계되어 잘 나타나 있다.

환경적인 면에서는 환율 상승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수출입에 관련하여 까다로운 검역검사 절차와 당사국의 정보부족을 애로사항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들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은 관료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행정처분권과 품목제조보고를 일선 시군구에서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식품산업체의 애로사항 상담기관 설치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내었으며 소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수익자의 부담원칙에 따라 회원제나 자문시 일정금액 납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보다 적극적인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는 많은 정보의 축적을 통한 제공이 필요하며 식품산업체와의 종합적인 정보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은 식품관련 법규 제개정시 적극적인 홍보 부족과 국내외 시장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나 향후 식품관련 법규 제개정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이나 제도 개발과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식품위생 감시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발전방향

(1)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요건은 안전성의 확보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의 합리화이다. 안전성과 관련된 규제는 위해분석(Risk Analysis)에 근거하여 과학적이고 일관적이어야 하며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오던 규제의 합리화에 있어 중여한 점은 부분적으로 개선된 규제가 이른바 '규제의 병목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접근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산업 관련 행정은 업체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민에게는 불안감을 심화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다원화된 식품안전 관리체계로서는 최근 일련의 식품사건에서 보듯이 예방조치와 신속대처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원화된 총괄 관리체계의 수립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품안전에 대해 국민은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있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권리,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권리, 식품안전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가 식품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공급토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약속이며, 의무이므로 이를 보장 할 수 있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설정한다.

대부분의 식품 위해물질은 원료로부터 유래되고(예: 다이옥신, 중금속, 잔류농약 등)가공,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고 있으므로,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총체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의 확대 및 외식증가로 인한 대량 식중독의 발생과 최근 정보화사회에 따른 식품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는 의료비의 증가, 노동력의 감소 등 경제·사회적 비용부담의 증가와 함께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감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총체적 위생관리대책이 시급한 설정되어야 한다.

환경호르몬 등 신규유해물질과 최근 국내외적으로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

품 등 신개발식품(NOVEL FOOD)의 안전성 평가는 국제적으로 위해분석(RISK ANALYSIS)에 입각한 과학적 관리기술을 도입하고, 과학적으로 불확실성을 감안한 사전예방적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도입하는 정책방향으로 조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의 조화를 추진하고, 식품안전 관련 기준·규격은 일관성을 갖도록 재평가 되어야 한다.

위해상황 발생시 관련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식품안전관리 담당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강력한 총괄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이를 집행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법적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업체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

① 가공식품 원료의 적정 확보를 위한 지원

우리나라는 농지면적의 협소, 기후조건 등의 농업여건 상 쌀을 제외한 주요 식품원료의 자급도가 매우 낮다. 그러나 가공식품은 그 성격상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타 공산품에 비해 상당히 높으므로 (약 80%) 원료의 원활한 구매와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원료의 안정적 공급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국내적으로는 계약재배, 품목별 생산단지화 등을 통하여 양질의 원료를 확보하고, 외국인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수입추천제도의 개선, 주요 원료의 관세율 인하, 완제품 보다 해당 원료의 관세율이 높은 소위 역관세의 조정, 일부 수입원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폐지,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개선 등을 거론할 수 있겠다. 그 동안 복지부에서는 원료로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면제하고, 신선농산물에 대하여는 신속검사를 시행하는 등 필요조치를 시행하여 조기에 원료가 공급되도록 노력하여 왔는데, 위에서 열거한 여러 사항은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② 식품 유통구조의 개선

국토 면적 협소로 인한 유통거점 확보의 어려움, 교통 혼잡으로 인한 물류 수송의 어려움, 유통정보의 체계적인 운용체제 미비 등 다른 공산품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점과 함께 식품은 유통기한 동안 품질 및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특히 냉장·냉동식품).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식품 물류 관련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냉장유통체계(cold chain system)확대를 위한 대 업체 재정지원을 실시하며, 장기적으로는 유사품목 이나 거점별로 유통단지 확보를 위한 지원을 고려하여 물류비의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시책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식품전자상거래의 급증을 대비하여 식품의 특성에 부합되는 관리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다.

③ 제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원

다양한 소재의 원료를 사용하여 신제품이 개발 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원료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중국적으로는 현재의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능성식품(건강표방성식품)을 수용 할 수 있고, OEM방식과 TOLL MANUFACTURING 방식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 식품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제고를 위하여는 가장 효율적인 자율관리 도구로 인정되고 있는 HACCP의 도입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경제적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세업소에 대한 COLD CHAIN의 확대 및 지원도 추진한다.

(3) 자율적 위생관리의 강화

식품의 위생관리는 품목 허가제의 폐지, 유통기한 자율화, 자가품질검사제도 도입 등 사후

의 자율적 관리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또한 업소 스스로 제조 공정 별로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가 1996년부터 도입되어 현재 식육제품, 유제품, 냉동식품, 수산식품 등에 적용하고 있고, 이를 전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어 진다. 한편 식품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해당식품을 회수토록 하는 식품회수제도(RECALL)를 도입하여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정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사후관리의 근본적인 보완책으로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의 추진이 거론되고 있는데, 본 제도의 시행에 대비한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4) 식품표시 강화에 대응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위생정책이 성공하려면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는 것 못지 않게 소비자가 식품을 바르게 인식하여 바르게 선택하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품의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식품의 표시는 식품정책과 산업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 기능성을 강조한 식품의 경우 건강정보를 나타내는 표시의 한계와 방법의 설정이 중요하다. 한편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은 광고사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시 및 광고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것에 반해, 소위 건강표방성식품(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소재를 미량 첨가하여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방안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와함께 생물공학 기법을 이용하여 생산된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 재조합 옥수수, 대두 등)의 표시 사후관리문제도 고려하여야 하겠다.

(5) 소비자 보호 및 홍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및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하여는 정부 차원의 홍보 및 정보제공과 함께 업체 차원의 소비자 보호기능도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는 자사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에 대한 궁금한 사안을 언제라도 물어 볼 수 있는 자동응답전화(HOT-LINE)의 설치, 상담센터의 설치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성인병등 식품에 기인되는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식품영양학적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6) 식품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처

과거 라면의 우지파동을 비롯하여 최근 간장의 잔류염소화합물 사건, 우유의 안전성 공방, 수입식육의 병원성대장균 O-157과 환경호르몬의 검출사례에서 보듯이 식품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해당업체는 물론이고 농민, 일반소비자, 정부 모두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된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언론은 그 특성상 고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식품위해물질과 관련된 사건 보도에 있어 정량적이라기 보다는 정성적인 것만 문제시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이러한 보도가 나가면 허용기준 이내이므로 안심하여도 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어도 식품에 대해 과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은 장기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바로 식품업체의 매출감소로 연결되고 나아가 기업이미지에 큰 손상을 주게된다. 이에 대한 대처로써 정부의 공신력 확보가 중요한데, 이는 식품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받아 정부 발표의 공신력을 배가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7) 개방화의 대처

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적극 대응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 전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

다. IMF 지원을 받는 우리나라는 그 지원조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더욱 더 강대국의 개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식품산업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즉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앞으로도 건전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먼저 안전성을 위주로 한 품질 및 가격 면에서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WTO의 식품 관련 주요 양대 협정인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SPS 협정)과 무역 상 기술장벽 협정(TBT협정)으로 인해 수입을 막아왔던 조치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식품산업 육성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식품규격(CODEX)과의 조화와 함께 WTO 에 제소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 관련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수출 및 통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② APEC 등 지역간 국제기구에 적극 대응

1989년 11월에 발족하여 현재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있는 APEC 즉 아태경제협력기구의 주요사업 중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서는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국제규격과 일치 조사사업, 식품 적합성 상호인정 일반협정을 완성하였다. 현재 한·일, 한·칠레간 무역자유협정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태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견주어 경제블록화에 적극 협력하여 우리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함께 OECD에서 개발 중인 식품 관련 안전성평가 동향을 검토·반영하여, 이를 수용할 체제를 갖추어야 하겠다.

③ 양자협상에 적극 대응

WTO의 제소는 양자간의 협상이 결렬된 후 취해지는 조치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양자협상 특히 한·미간, 한국과 EU 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식품유통기한, 수입식품검사제도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만의 특수한 환경(예 하절기의 고온 다습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 상존, 식품 유통구조의 열악화, 식품유통의 상이, 국민의 영양상태)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인 조사·연구사업의 과감한 투자와 통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일, 한·칠레 등 상호인증협정(MRA)을 유리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산업측면의 배려가 필요하다.

④ 식품통상 관련 인력 풀(Pool)의 구축

일반적으로 통상전문가라고 하면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우선 떠올리기 쉬운데, 통상은 외교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식품 통상 문제 협상 시 관련 외국의 전문가에게 논리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하여는 협상 담당자의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식품위해미생물,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 주요 통상 분야별로 국내외의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전문가 현황을 파악하여 인력 풀을 구축하고, 이를 통상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 론

IMF체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철저한 시장경제의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측면에서는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대다수 선의의 업체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행정의 구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⁶⁾. 서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IMF 체제를 기회로 식품행정의 방향은 IMF 즉,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업체

를 장려하고 감동시키는 I(Inspiring)행정,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적절한 M(Moderate) 행정,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훌륭한 F(Fine)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⁷⁾. 산업체에 있어서도 열악한 주변환경을 극복하는 자구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요망되는 시대이다. 새 천년을 맞이한 금년 WTO체결 이후 처음으로 신규 라운드가 시작되었으며, 중국의 WTO 가입을 기회로 개방화된 중국시장의 기회가 보다 많아 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원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양질의 저렴한 원료를 적기에 수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진 가공기술에 의하여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변화된 환경을 기회로 삼아 대응하면 보다 많은 수입대체 효과와 수출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식품산업의 성장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은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최근 무르익고 있는 남북한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식품산업 부문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 북한과의 합작방안 등 개방화 및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노력이 21세기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참 고 문 헌

- (1) 식품 및 식품첨가물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청, 각년도
- (2) 김영찬등, 식품연감, 농수축산신문사, 1998, 1999
- (3)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청, 2000
- (4) 제도개혁백서 보건복지규제완화, 보건복지부, 1998, 1999
- (5) 보건복지 제도개혁과제 심사분석 편람, 보건복지부, 1997
- (6)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 한국조세연구원, 1996
- (7) 김영찬 : IMF를 극복하기 위한 식품행정의 I(Inspiring), M(Moderate), F(Fine), 식품과 학과 산업 31(1),1998